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8호

심석희 선수에 대한 2차가해, 심각한 수준

‘심석희 문자’ 넘긴 조재범… ‘법정 밖 복수’ 문제 없나

이정한 세계일보 기자

심석희 측 “극심한 정신적 충격 시달리고 있다. 2차 가해 멈춰달라”

신미진 매일경제 기자

심석희 ‘고의 충돌’ 의혹,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관리 문제이다

김학수 스포츠칼럼니스트, 스포츠학 박사

문체부 “심석희 15일 대한민국체육상 보류…빙상연맹 조사후 결정”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2021국정감사]스포츠윤리센터, 부진 실적 진짜 원인은 부실지원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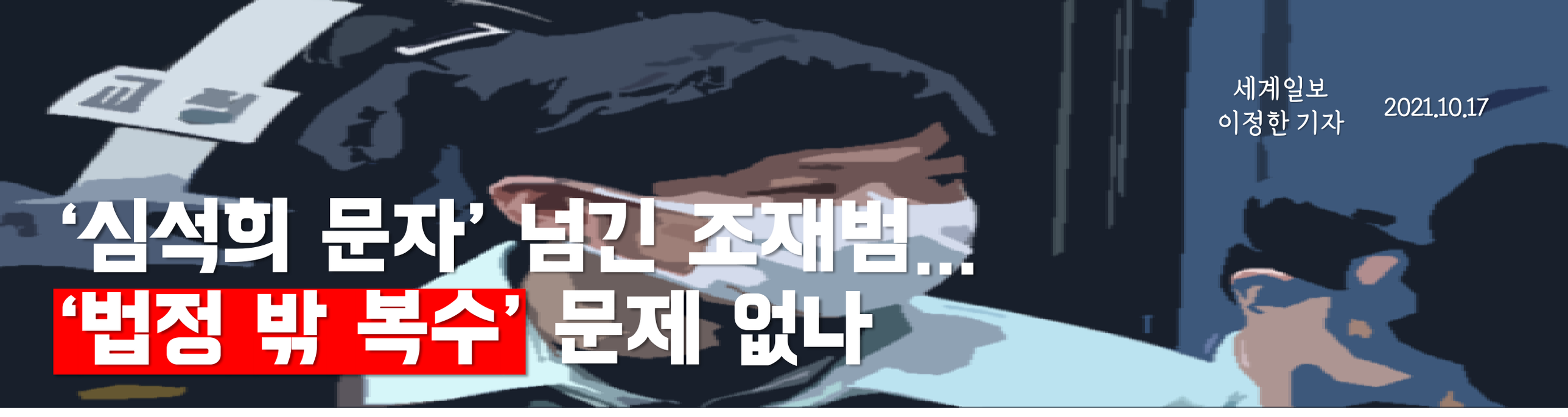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급한 사례 조사 착수”

장보인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



‘심석희 문자’ 넘긴 조재범… ‘법정 밖 복수’ 문제 없나

세계일보
이정한 기자

2021.10.17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심석희(24·서울시청)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어권 차원에서 얻은 피해자 자료를 유출한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조 전 코치로부터 심석희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A코치의 문자 메시지가 첨부된 진정서를 받았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과 김아랑 등을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1000m 경기에서 최민정에게 고의로 충돌한 의혹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해당 선수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재판 중 얻은 자료 유출시, 명예훼손 적용 가능

조 전 코치는 재판 중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자 메시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피고인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방어권 차원에서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자료를 분석해 의견서를 내고, 의뢰인한테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방어권 차원에서 얻은 자료를 제3자에게 알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의 공적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자료가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장 계속

자료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15515179?OutUrl=naver

◆피해자 민감 자료 보복용 유포? “흔치 않은 사례”

조 전 코치가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민감한 자료를 ‘보복용’으로 유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외적인 사례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만 한다. 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포렌식을 받는다. 피해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포렌식 업체에 자비로 포렌식을 의뢰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출해도 된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면 그때 그에 대한 입증 차원에서만 휴대전화를 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심석희 측이 사건과 상관없는 본인의 민감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다 넘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시 수사기관에 포렌식을 맡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폰을 임의제출할 당시에는 다투고 있던 성폭행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거리낄 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전해진 후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과 인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논란이 조 전 코치의 범죄 혐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고의충돌 논란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등 범죄 혐의와 별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자료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211015515179?OutUrl=naver

매일경제
이미진 기자

2021.10.16

심석희 측 “극심한 정신적 충격 시달리고 있다. 2차 가해 멈춰달라”

최근 동료 선수 비하 논란에 휩싸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측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조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재범 변호인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심 선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항소했고, 지난달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씨에 대한 원심 판결문이 퍼지고 있다. 판결문에는 조씨가 심 선수를 향한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강제추행 경위 등이 담겨있어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심석희는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선수를 비하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데 대해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여자 1000m 결승전에서 최민정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료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80809/

김학수
포츠칼럼니스트, 스포츠학 박사
2021.10.14

심석희 '고의 충돌' 의혹,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관리 문제이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 심석희(24, 서울시청)는 2년 전 자신을 지도하던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을 고발해 '스포츠 미투'가 들불처럼 스포츠계에 번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심석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관행처럼 자리 잡은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 등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심석희의 성폭력 문제는 개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관리 체계와 훈련방법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용기 있는 폭로를 통해 선수 인권 향상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심석희를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자로 시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3일 평창동계올림픽 때 고의로 충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심석희를 올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은 그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주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해 심석희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도돼 큰 충격을 줬다. 심석희가 동료인 최민정을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도록 고의 충돌했다는 보도를 해 논란을 빚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당시 심석희의 메신저 톡 내용엔 심석희가 대표팀 A코치와 함께 팀동료 최민정, 김아랑 등을 비속어로 조롱하는 내용, 고의 실격을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문구가 담겼다. 조 코치 측은 심석희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의 충돌'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 측은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에 있었던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기사를 접하고 충격받았을 김아랑과 최민정, 코치 선생님들께 마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신의 행동에 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심석희 성폭력과 고의 충돌 파문을 보면 그동안 국가대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쇼트트랙은 한국이 최강국으로 국가대표 선수들 간에도 경쟁이 아주 심하다. 선수들 간에도 서로를 이기기 위해 양보 없는 라이벌전을 펼치며 소속 학교 간 경쟁도 대단하다. 수십년간 고질적인 문제였다.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 간의 라이벌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일부 선수의 사회적 일탈을 불러왔다.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대표 관리의 부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심석희 파문은 국가대표로서 나라를 대표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출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망각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비단 개인적인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라고 해서 모두 모범적인 선수인 것은 아니다. 운동을 제일 잘해 최고의 경기력을 인정받아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덕, 윤리, 인성 등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심석희는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을 놓친 것을 서운해하기보다는 성적을 올리지 못한 동료 대표선수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는 감성을 지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대표팀도 심석희 문제를 개인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대표팀 관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367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2021.10.12

문체부 “심석희 15일 대한민국체육상 보류… 빙상연맹 조사후 결정”

평창올림픽 '고의충돌' 논란에 휩싸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이 보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시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5일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심석희를 경기상 수상자로 내정했었다. 지난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석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성폭행과 관련해 용기 있는 폭로를 통해 선수 인권 향상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8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평창올림픽 당시 심석희의 메신저 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체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해당 메신저에는 심석희가 대표팀 코치와 함께 팀 동료 최민정(23·성남시청) 김아랑(26·고양시청) 등을 비속어로 조롱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또 고의 실격을 연상케 하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심석희는 11일 소속사를 통해 '문자 내용에 대해 동료들에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반성하지만, 고의 반칙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체육상 시상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그대로 시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15일 시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한빙상연맹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고, 사실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후 시상을 그대로 할지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수상후보를 선정할 때 위원회가 단일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 대한 시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심석희 선수에게 이 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자료 출처: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10130100075840004970&servicedate=20211012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2021.10.12

[2021국정감사] 스포츠윤리센터, 부진 실적 진짜 원인은 부실지원

스포츠윤리센터의 부진한 실적 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14건에 불과했던 심의처리완료 건수가 7월 14건, 8월 21건으로 급등했다. 7월 한달 동안 앞선 10개월과 같은 실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실적 급등 원인을 필수 인력인 변호사 채용에서 찾았다. 김 의원은 “필수 인력인 변호사를 4번 공고를 거치며 응시기준을 경력 5년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나서야 간신히 채용할 수 있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다보니 응시하는 사람이 적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김 의원은 “40명이 배치된 스포츠윤리센터의 2021년 예산이 53억인데 비해 38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도핑방지위원회는 80억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히며 “예산으로 인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인원 채용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초기 설계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김의겸 의원실의 분석 결과, 센터의 정규·신입직원 인건비는 유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의 76% 수준에 머물렀다.

센터의 업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공간으로 상담실과 조사실은 축소됐다. 대회의실은 징계정보 발급업무 보안유지를 위해 전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회의실은 전문조사위원 업무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징계정보시스템’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위한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예산도 주먹구구식 책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자료를 다루어야 하는 정보화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센터는 16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부 책정안은 고작 1억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 예산 18억원과 비교해도 납득이 안가는 액수로 100원 주며 빵에 우유까지 사오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에 조사권한만 있고 징계권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징계권이 없으니 센터가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구해도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징계가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건 중 1건은 일부수용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실한 지원으로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징계권과 강제력을 부여하도록 개정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망설여진다”고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9212264&mediaCodeNo=258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2021.10.13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급한 사례 조사 착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는 올해 8∼9월 일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인권 강화교육과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조처가 시급한 인권침해 사례를 식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체육대학교와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투기 종목(레슬링·복싱·씨름·유도·태권도)을 보유한 수도권 9개 대학 중 6곳에서 학생 선수 423명을 상대로 교육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422명이 심층 상담에 응했는데, '직접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선수는 30명(7.1%)으로, 20명 중 1∼2명꼴로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력이 가장 많았고, 사생활 통제와 괴롭힘, 성추행 등이 뒤를 이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침해 경험을 털어놓은 30명 중 11명에 대해 전문 상담을 지원했으며, 조사를 희망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를 안내해 사건으로 전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과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도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시행됐다.
실태조사와 상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대1로 이뤄졌다.

단체훈련과 기숙사 생활 등으로 전화·외출이 제한적인 운동부의 특성과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MZ 세대의 특징을 고려했다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명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센터의 지원사업 안내와 폭력·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추후 대상 대학교와 종목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스포츠인권 강화교육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침해나 비리로 고통받는 체육인을 찾아 심리·정서 상담 및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3089000007?input=1195m

주간 스포츠 소식

[단독]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합격·탈락 뒤바꾼 '엉뚱한 채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51207&code=61111111&cp=nv

일반-대학부 땀방울 저버린 '제102회 고등체전'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564

'올림픽 방송사고' MBC, 국감 불려나와 집중포화…"개선조치 강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14200848199 90

'학교 운동부의 현재와 미래'…스포츠인권포럼 16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063500007?input=1195m

[단독그후] 조재범 판결문 유출 '파문'…심석희 "정상적 생활 어려운 고통"

http://news.tf.co.kr/read/national/1893757.htm

심석희에 '성폭력 피해' 의심하는 사람들…'2차 가해' 이대로 괜찮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1418432239552

적나라한 '조재범 성폭행' 판결문 공개…심석희측 "2차 가해 중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513322945242

[자치시대] 누구나 될 수 있는 스타… 아무나가 아니길 바랍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7256

약 3개월 만에 관중 받게 된 실외 스포츠 경기장

https://newsis.com/view/?id=NISI20211017_001805555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